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3면	광역의원들 공항·군소음 주민피해 공동 대응	1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전국 도의회 공항소음 피해 대책 연대	2
강원도민일보	03면	'최문순 책임론' 한목소리… 인사청문서 대립	2
江原日報	13면	"규제 탈피 기회의 땅 도약"	3
강원도민일보	03면	여야 총선모드 전환 가속 로드맵 수립·조직정비 분주	3
강원도민일보	14면	평창군보훈단체협 나라사랑 음악회	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이기찬 부의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박기영 안전...	4
江原日報	21면	[동정]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5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이기찬(양구) 도의회 부의장	5
강원도민일보	08면	[동정] 이승진(비례) 도의원	5
江原日報	01면	내년 국비 확보 먹구름 道 첨단사업 예산 사활	6
江原日報	07면	강원자치도 올 상반기 외자유치 전국 최하위	7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학생진단평가 2년차… 교육격차 해소 기대 참여율 증...	8
강원도민일보	01면	균형발전 핵심 '기회발전특구' 벌써부터 경쟁 치열	9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타당성 확보' 사전준비 돌입	9
江原日報	01면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1심서 한전 일부 승소	10
강원도민일보	05면	법원 "한전, 정부·도·고성·속초에 60억여원 지급하라"	10
江原日報	05면	이재민들 "정부 소송 강행 혼란만 남겨" 분통	11
江原日報	13면	"광역상수도망 구축 절실"	12
강원도민일보	16면	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필요"	13
강원도민일보	07면	강원 원목자원 활용 건축용 목제품 생산·유통 본격화	13
江原日報	04면	철원 등 전국 90개 인구감소 위기 지자체 연대 움직임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GTX-B 춘천 연장 힘 모아야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경제성장률 1.4%로 하향 경기 우려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日 '오염수' 방류 임박, 동해안 어민 피해 대책을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제2경춘국도 2029년 준공, 늘어난 공사비 반영해야	18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03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항국 제주도 의원) 2차 회의가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규만(횡성) 도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의회 제공

광역의원들 공항·군소음 주민피해 공동 대응

횡성 최규만 도의원 특위 위원 위촉

전국 광역의원들이 공항소음, 군소음 등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서울시의회에서 특위 위원 위촉식과 2차 회의를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선 최규만(횡성) 도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가운데 우형찬(서울), 이복조(부산), 박소영(대구), 신영희(인천), 명진(광주), 안경자(대전), 정치락(울산), 박상현·홍원길(경기), 최무경(전남), 최학범(경남), 김항국(제주) 등 13명 광역의

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김항국 제주도의원이 맡았다.

최규만 의원은 5일 "군소음, 공항소음 등 횡성뿐 아니라 원주, 양양, 강릉 등 소음 피해지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 "전국 시도의회차원에서 보상기준 개정 등 입법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은 공군 8전투비행단의 곡예비행단 '블랙이글스' 훈련지다. 횡성과 원주 주민들은 소음피해, 경유스모크 성분 조사 등을 주장하며 출근길 시위를 2년 6개월여 동안 이어가고 있다.

한편 3차 회의는 오는 9월 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다.

이설희

2023 07 06 ()

03

江原日報

자치도의회-전국 도의회 공항소음 피해 대책 연대

시도의장협 대책위 구성 결정
도내 대표 최규만 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공항소음 대책을 위해 전국 도의회와 연대해 움직인다. 강원 지역 대표로 최규만(국민의힘·횡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이하 공항소음대책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인 공항소음대책위는 올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성과 운영이 결정됐다. 각 시·도 공항소음 피해지원 정책이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사무로 분류되며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

역의회가 논의에서 배제되자 전국 단위로 지해를 모으기로 한 것이다.

5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전국 의원들은 소음 관련 전문가 그룹 리스트 확보에 대해 논의하고 공항소음대책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 지원 내용을 확인했다. 또 각 권역별 현안 사항이 공유됐다. 최 의원은 도내 공항뿐 아니라 군용기 소음 등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최규만 의원은 “횡성뿐 아니라 강릉, 양양 등 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공항소음 피해를 보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 의원들과 개별 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03

‘최문순 책임론’ 한목소리... 인사청문서 대립

⑧ 민선8기 출범 1년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 협력과 긴장 강특별 도 조례 구체화 ‘협력’ 요구

김진태 도정과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도와 도의회는 최문순 전임 도정 현안에는 협력 관계를, 인사청문 등에는 긴장 관계를 연출했다. ‘강원특별법’ 시행약 1년을 앞두면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알펜시아 매각 담합 의혹,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의혹 등에 ‘최문순 책임론’을 꺼내며 한목소리

를 냈다. 지난해 10월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자연스레 전임 도정 역점사업을 정조준했다.

동해 망상1지구·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사업자 선정 불법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도의 ‘특별감사’와 의회의 ‘최문순 책임론 강조’가 맞물려갔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강원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등에선 긴장감이 형성됐다. 의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관점, 강원 현안 연구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했고, 의원들 사이에선 부정 기류가 다수 형성됐다.

도 관계자는 “지사가 청문위원들을 두고 ‘우리당이 맞느냐’며 놀라기도 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강원연구

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희철 의원은 “최종 승인 날까지 이들의 시간동안 도정협력관 등이 의원 설득에 나섰고, 위원들이 마음을 바꿨다”고 회상했다. 도와 도의회는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을 ‘도 조례’로 구체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자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별법 핵심 조항 다수는 도 조례로 운용된다.

도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당장 절대농지해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총량이 있는데, 도 의원들이 각 지역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도와 도의회가 다른 차원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두 기관의 박자에 맞춰 특별법이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이설화

2023 07 06 ()

13

江原日報

“규제 탈피 기회의 땅 도약”

고성군

현안 방향 모색 최선 약속
복합휴양도시 비전 제시

고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첩된 규제를 벗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5일 고성군청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고성군의장 등 군의원, 김용복 도의회 농업수산업위원장, 이지영 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직접 ‘일타 강사’로 나서 ‘4대 규제를 풀고 발전하는 자유의 땅’을 주제로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개혁을 고성군에 접목한 해설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 지사는 “고성군의 경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5일 고성군청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업규제 개혁을 통해 132만 2,300여㎡(40만평)가 해제될 수 있어 시급한 개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화진포의 도지정문화재 해제 건의 등 머리를 맞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 전체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지역이 규제 면적인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며 미래 구상을 설명했다.

함 군수는 ‘통일 대비 자유도시, 산림·해양 복합휴양도시’ 건설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환경 분야에서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신속한 추진, 강릉-제진 철도 간성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 137만㎡ 중 95.2%가 농업진흥구역인 만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성=김천열기자

강원도민일보

여야 총선모드 전환 가속 로드맵 수립·조직정비 분주

2023 07 06 ()

03

국힘 17일부터 조강특위 면접

차기 도당위원장 박정하 내정

민주 정권심판론 여론화 집중

총선 주도권 선점 등 공세 강화

차기 총선이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선거를 대비한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강원정치권 역시 총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

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내 조직과 전열 재정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원주를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마감했고, 최근에는 중앙당사에서 조강특위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조강특위는 오는 17일부터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갖는다.

이번 인선 작업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치러진 면접에 참여했던 권이중 변호사, 박동수 변호사, 안재운 미래교육

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원 대표,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등 6명을 비롯해 현역 도의원인 3선 김기홍 부의장과 초선 최재민 도의원이 가세,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도당위원장 교체 준비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당은 13일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이후 18일 도당위원장을 최종 선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들간의 합의 추대했던 관례에 따라 박정하 (원

주갑) 의원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주도권 선점 등 여론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송기현 (원주 을) 의원은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검증특위 가동과 청

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도당도 이날 도내 여론을 겨냥한 논평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부착한 민주당 나유경 의원을 징계 회부하고, 국민의힘 도당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옹호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남해군의원들은 오직 남해군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남해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본받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14

평창군보훈단체협 나라사랑 음악회 평창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이육환)는 5일 군문화예술회관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 정장호 교육장, 최종수 도의원과 군민, 보훈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 07 05 ()

[동정]이기찬 부의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박관희.양숙희.이승진 도의원

이기찬(양구) 도의회 부의장, 정재웅(춘천) 사회문화위원장.박기영(춘천) 안전건설위원장. 박관희(춘천).양숙희(춘천) 도의원은 6일 오후 4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도재활병원장 취임식에 참석.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6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토론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7 06 ()
21

도재활병원장 취임식

◇이기찬강원특별자치도의

회부의장은 6일
오후 4시 강원특
별자치도재활병
원에서 열리는
도재활병원장

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15이기찬(양
구) 도의
회 부의장
은 6일 오
후 4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
원 2층 회의실에서 열
리는 병원장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08이승진(비
례) 도의
원은 6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에서 열리는 '학교 급
식실노동자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토론회에참석한다.

2023 07 06 ()

01

江原日報

내년 국비 확보 먹구름 道 첨단사업 예산 사활

정부 세수 감소에 '긴축' 고삐
9조5천억 목표 달성 차질 우려
우선 대형사업 물꼬 예산 집중
향후 강력한 지원 확보에 방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국비 확보전인 데다 내년부터 각종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는 점에서 국비 9조5,000억원 확보라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지만 벌써부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첨단산업 등 신사업의 활로를 열어 줄 '마중물' 예산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 예산안은)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예산 재조정을 주문했다. 내년 정부 예산의 지출 증가율은 올해에 비해 3%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대비 5.3%(4,8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 파이가 줄어든 만큼 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목표다.

결국 내년 강원자치도 국비 확보전의 성패는 '양'보다는 '질'에 달려 있다. 다년간 추진되는 대형사업의

물꼬를 트는 이른바 '마중물' 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향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

강원자치도가 내년 반영을 노리는 핵심 마중물 예산은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지역 현안에 집중돼 있다.

도는 내년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45억원 등 95억원의 국비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자치도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서는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춘천) 56억원, 맞춤형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 기술개발(강릉) 42억원, 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원주) 30억원, AI 헬스·바이오 R&D센터 구축 및 AI솔루션 개발 실증(춘천·강릉) 20억원 등 148억원의 반영을 노리고 있다.

지역 현안 사업은 원주 종축장 부지에 건립될 강원 오페라 하우스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 양양 사계절 인공서핑 교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국비 목표 9조5,000억원 달성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 주요 현안사업 예산 2조원 가량은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며 "질과 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 07 06 ()
07

강원자치도 올 상반기 외자유치 전국 최하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은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투자 유치 신고금액 170억9,200만 달러 대비 0.16%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실제 입금된 자금을 뜻하는 '도착

국내 투자유치 신고금액 중 0.16% 불과한 2,800만 달러
'도착 금액' 기준 3,100만 달러 ... 17개 시·도 중 15번째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도가 유치한 실적은 3,100만 달러로 대구, 제주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도내 외자유치 규모(약 800만 달러)에 비하면 264% 가량 늘었지만, 경남(2,664%), 대전(2,272%) 등 타 시·도의 증가세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실적이다.

이는 강원자치도 내 인프라가 취약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를 얻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도내 열악한 투자환경이 지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기업들도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대사관이 인접한 수도권 투자를 선호한다"며 "강원지역에서 레고랜드를 비롯해 몇몇 해외 유턴기업을 제외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집계를 시작한 1963년부터 올해까지 강원지역 총 누계 외자유치 금액은 20억2,700만 달러(도착금액 기준)로, 이 기간 국내 전체 외자유치 금액의 0.71%에 불과했다.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다.

그나마 레고랜드를 통한 외자유치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팔찌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외자유치를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04

강원학생진단평가 2년차...교육격차 해소 기대 참여율 증가

초교 91%시행 전년비 25.6%p↑
학업성취도 파악 등 참여 결정
학력신장 신뢰성은 의견 분분

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5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로 2년차를 맞았지만 일선 교육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는 상태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이날 도내 초교 350곳 가운데 319곳(91.1%)에서 진단평가가 시행됐다. 중학교는 일주일 뒤인 12일 진행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파악, 이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기대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65.5%) 보다 참여 학교 비율이 25.6%p 상승했다. 올해 강원 학생진단평가에는 도내 초등학교 350곳 가운데 319곳(91.1%)이 참여하며, 도내 4·5·6학년 3만6667명 중 2만8322명(77.24%)이 응시한다. 중학교



5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2023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치르고 있다.

김정호

의 경우 160개 학교 가운데 138곳(86.25%)이 동참하며, 학생 3만7135명 중 2만9447명(79.3%)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춘천 A초교의 경우 지난해에는 진단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학부모 요구와 학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학년만 응시하기로 결정했다. A초교 학생들이 지필평가를 치른 것은 입학 후 이번이 처음이다. A초교 관계자는 “평

가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대가 높아져 참여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학습에 더 관심을 갖고 각자의 학습 속도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진단평가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지난해 진단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B초교는 학부모 요구를 반영해 올해는 참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B초교 교장은 “시험만 본다고 학생 학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원학생진단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고, 평가 후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입증되지 않아 아직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 과목 응시가 제외되며, 이외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범위는 이전학년 2학기부터 해당학년 6월까지 과정이다. 도교육청은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8월 말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단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진단평가 결과 미도달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추가로 프로그램을 지원한 뒤 12월에 재차 향상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민영

2023 07 06 ()

01

강원도민일보

균형발전 핵심 '기회발전특구' 벌써부터 경쟁 치열

세금 감면·인프라 확충 등 혜택

시·도 1곳씩 지정 내년초 공모

도내 9개 시·군 전담조직 구성

맞춤형 전략 수립 행정력 집중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것과 맞물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각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특구 지정 작업이다. 현재 도가 파악한 희망 지자체만 9곳으로 파악되는 등 내부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에 1개씩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내년 초 공모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군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은 물론 개발부담금 100% 감면,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 도입 및 조종고 설립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강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를 고리로 고용창출, 인구 유입 등이 직결돼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등 9개 시·군이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겨냥, 도내 각 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내년 초 공모 일정을 감안한다면, 도내 희망 지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 제정안을 근거로 하며 특구 지정 작업과 '국가철도망 반영 여론전'에 돌입하기로 예상되면서 도내 각 지자체간 경

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가 반도체는 물론 의료기기, 디지털산업, 바이오산업 등에 앞다퉀 나서고 있는 만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부 기준이나 오지 않았음에도, 각 시군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지역균형발전에 입각해 만든 첫 시도인 기회발전특구는 추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돼 도내 각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02

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타당성 확보' 사전준비 돌입

자체 철도 SOC 연구용역 추진

원주~철원 철도·GTX 등 대상

시군 건의 철도사업 검토 병행

선별 후 내년 초 국토부 제출

속보=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본지 7월 5일자 1면) 반영 작업과 관련, 강원 주요 철도사업에 대한 여론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도정 주요 목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 추진, 강원 주요 철도 사업

대통령·도지사 공약(용역 확정)

• GTX-B 춘천 연장(55.7km)

• 원주~춘천~철원(120km)

• 연천~월정리 경원선(29.3km)

지역 건의(검토 후 용역 대상 추진)

• 재전~삼척 태백영동선(123km)

• 평창 진부~정선 나전(35km)

• 철원~내금강 금강산선(32.5km)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복선화

삼고 있는 만큼 철도망 구축 사업 조기 관철을 위해 자체 연구용역 등 사전작

업 준비에 돌입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GTX-B 춘천 연장, 원주~춘천~철원 등 주요 철도사업의 타당성을 확보·보완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철도망 반영 여론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도가 내달 추진하는 '강원 철도 SOC 사업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대통령·도지사 공약 철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철도분야 대통령 공약사업은 △원주~철원 △삼척~강릉 고속화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등으로, 이중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되지 않은 사업인 원주~철원 철도, GTX-B 춘천 연장이 도 자체 연구용역으로 진행된다. 또, 도지사 공약인 연천~월정리 노선 역시 용역 대상 사업이다. 시·군 건의 철도사업도 검토해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군 철도 현안 사업은 △재전~삼척 △평창 진부~정선 나전 △철원~내금강 금강산선 △춘천~속초 복선화 등이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오는 2025년 최종 확정된다. 도는 자체 철도 SOC 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강원 철도사업 선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에 각 사

업 리스트를 보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달청이 오는 11일, 해당 용역 개찰을 진행하면 제안서 검토 등 연구용역 업체 선정은 거쳐 이달 중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내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대상 5차 국가철도망 구축 설명회에 예정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방침을 검토한 뒤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철도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 07 06 ()
01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1심서 한전 일부 승소

법원, 정부 청구 400억여원 중 60억원만 인용

2019년 고성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던 이재민들은 “소송이 진행된 지난 2년간 큰 혼란을 겪었다”며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관련기사5면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속초시 포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反訴)’인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원고·반소 피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피고·반소 원고)가 한전에 청구한 400억여원 중 60억여원만 인용했다. 우선 정부가 고성 산불 피해를 복구하며 지출한 비용 400억여원 중 300억여원에 대해서

만 한전의 비용상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재난지원금이나 구호비용으로 볼 수 없고,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과 임시주거시설 설치 비용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원고(한전)가 피해 주민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비용상환청구 대상에서 전부 제외했다.

또 한전의 비용상환의무가 있는 300억여원 중에서도 20%만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한전에 임시주거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며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 사정을 실시한 뒤 피해 보상금 약 562억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신하림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05

법원 “한전, 정부·도·고성·속초에 60억여원 지급하라”

고성산불 법정다툼 한전 일부승소

속보=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2019년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3년 여간의 법정 공방(본지 6월 1일자 4면 등)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1심 판결에서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총 청구금액 약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재난지원금 상환책임 20% 제한”

비대위, 사법부 판단에 반발

“피해 이재민에 무책임한 처사”

■ 한전-정부 대립 첨예

정부는 지난 2021년 고성산불 당시 한전에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5일 재판부는 한전의 비용상환책임

중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 임시주거시설 설치비용은 제외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전이 피해 주민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시주거시설 설치비용의 상환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결과”라는 취지로 비용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했다.

재판부는 전신주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한전이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하 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비용상환 의무 범위와 책임’을 판단했다. 또 책임을 제한한 항목을 제외한 잔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뒤 피해 보상금 약 562억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한전이 정부에 28억여원을, 강원도에 15억여원을, 고성군에 13억여원을, 속초시에 3억여원 등 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역대급 피해 낸 고성산불...이재민 반발

이번 고성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전신주 개폐기 내 전선에서 불꽃(스파크)이 튀면서 초대형 산불로 확산했다. 이 불로 산림 1260ha가 소실되고 이재민 959명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재산 규모는 약 899억원이다. 사망자 2명

도 발생했다.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 노장현 위원장은 “국가가 이재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던지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향후 피해 주민들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재민들은 하루 아침에 모든 산불에 의해 재산 손실을 입어 복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법의 판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江原日報

2023 07 06 ()

05

이재민들 “정부 소송 강행 혼란만 남겨” 분통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일부 승소 판결

정부가 2019년 고성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한전이 승소하면서 이재민들에게 지급을 중단하고 구상유보금으로 묶어뒀던 242억원은 지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었다. 재난안전법의 제66조 6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

“정부 복구 결단 대신 소송” 사실상 패소 판결에 맹비난 구상유보금 지급 재개 촉각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대로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이재민들은 “정부가 재량권이 있음에도 소송을 강행해 2년5개월간 상처와 혼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 노장현 위원장은 5일 춘천지법에서 1심 선

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을 사법부의 판단에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상권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모르는 이재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고령의 이재민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재민들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구상권 청구 소송 대상으로 본 것 자체가 큰 상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한전의 비용상환 의무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생활안정지

원금(교육비), 임시주거시설 설치비용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원고가 피해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한전)에게 임시주거시설 설치비용의 상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인정한 한전의 비용상환의무 범위는 400억여 원 중 300억여원이었고, 이 중에서도 20%로 제한됐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전액이 인용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구상권 행사여부는 더 신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7 06 ()

13

“광역상수도망 구축 절실”

속초시

3가지 특례 신설 구상
고도제한 해제 등 집중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시
대 영동북부권 광역상수도망
구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장은 5일 속
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
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 자리에서 속초시 특례
활용 발전전략 설명을 통해 3
차 특별법 개정안에 광역상수
도 직권 설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별 행위제한기준 완
화 등 3가지 특례 신설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
000만 관광객 시대 광역상수
도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정학적으로
설악산이 있으니 물이 많을
것 같지만 설악산에서 동해로
가는 유속이 너무 빨라 식수
원인 쌍천에 머물 수 없는 구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라며 “도지사의 권한으로
고성이나 양양에 남는 물이
있으면 광역상수도망으로 먹
는 물 정도는 속초와 함께 나
눌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사규제로 인한
장사동 지역 고도제한 해제에
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남부권은 많이 발전되고 있는
데 반해 북부권은 군사규제에
발목이 잡혀 고층건물을 올릴
수 없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
각하다는 것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

사는 “3년만 있으면 속초에
철도가 가로, 세로로 놓여 강
원특별자치도의 교통의 요지
이자 수도권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
를 전했다.

속초시는 도민설명회에 이
어 ‘시민과 함께한 속초 60년,
미래 100년으로 초대’ 행사를
열어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신청사 건립, 설악동 재
건사업, 속초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속초시 미래 100년
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설
명했다. 속초=권원근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16

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필요”

찾아가는 강원특자도 도민설명회

속초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나
후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
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
민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시대
에맞춘속초시미래전략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선 시장은 지역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대포항과 동

명항 일대의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
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동네의 골목상
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
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이 까다로운 문
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병선 시장은 “낙후된 골목 상점
가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재 도내 춘천 1곳, 원주 2
곳 등 3곳만 지정돼 있는 수준”이라며
“현행 2000㎡ 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에서 ‘2000㎡ 이내 면적 20개 이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5일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상 점포’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강
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특
례 △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한 특례
△군용전기통신기지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
제로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발표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07

춘천목재산업단지 준공식이 5일 춘천 동내면 현지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한광호 춘천목재협동조합 이사장, 목재협동조합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원 원목자원 활용 건축용 목제품 생산·유통 본격화

춘천목재산업단지 준공식

춘천목재협동조합(이사장 한광호)은
5일 동내면 현지에서 춘천목재산업단
지 준공식을 열고 산림수도 강원특별
자치도의 양질의 풍부한 원목자원을
활용한 건축용 목제품 생산·유통에 돌
입한다.

이날 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신
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

호 춘천시의회장, 한광호 이사장 등이 참
석했다. 춘천목재협동조합은 2020년
3월 고부가가치 건축재 생산을 통해 탄
소배출 절감을 실현하고 국산목재 가
공 산업의 허브의 역할을 하고자 출범
했다. 춘천목재산업단지는 정부 및 지
자체 지원금과 민간 투자금 등 총 70여
억원을 투입해 3년여만에 춘천 동내면
일원에 마련됐다.

최첨단 목재 생산설비도 갖췄다. 자

동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한 시공과
인건비 절감을 통해 목조건축의 가격,
품질, 성능 경쟁력을 크게 개선했다. 이
미 전국 각지에 대리점 유통망을 구축
했으며 해외 유통망도 확보해 산림경
영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
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
다. 한광호 이사장은 “준공 후에도 부족
한 점을 찾아 발전해나가는 춘천목재
산업단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3 07 06 ()

04

철원 등 전국 90개 인구감소 위기 지자체 연대 움직임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協 “국가 차원 특단의 대책 필요”

철원을 비롯해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전국 90여개 지자체가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해 박우량 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송인현 괴산군수 등 지자체장과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윤창현·김종민 국회 정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인구감소 추세와 지역 침체 징후가 뚜렷하다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종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가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철원군과 괴산군, 신안군 등 전국 90여개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도 이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비롯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대 등을 고민하는 한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 19

GTX-B 춘천 연장 힘 모아야

-정부용역결과 이달 발표,관철까지 최선을

정부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되는 가운데, 춘천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춘천과 홍천, 양구, 화천 등 강원 영북지역 주민뿐 아니라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현안입니다. 춘천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인데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역 여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도와 지자체, 정치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춘천 연장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당초 인천대 입구~남양주 마석 구간으로 예정됐던 노선이 이어지면, 춘천 권역은 광역 수도권화에 진입할 교통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도착합니다. 또 ITX-청춘 열차보다 춘천역~용산역 소요 시간이 17분 단축되고, 서울역, 여의도, 신도림 등 서울 주

요 도심으로 환승 없이 이동합니다.

관건은 춘천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있습니다. 철도망 사업에 포함돼야만 국비 약 7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확정 노선과 동일하게 하루 92회 운행시 연장 사업비는 43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도와 춘천시는 620억원에 이르는 강원도 몫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GTX 노선의 연장·신설 등의 사업 타당성을 따져 최종 확정 노선안을 도출한 뒤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사업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B/C(비용편익분석)가 1.0 이상으로 예상돼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물론, 내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할 단계는 아닙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분담 비율과 철도기지 건설 비용, 기존 ITX, 춘천~속초철도 운행 횟수 조정 등 해결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선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여야와 정파를 떠나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춘천 연장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6 ()
/ 19

경제성장률 1.4%로 하향 경기 우려

-지자체 지출 감축도 요인, 지역 독자대책 병행-

올해 경제 실질성장률 전망값이 기존 1.6%에서 1.4%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경제흐름에서 예상과 달리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기대했던 반도체와 중국 관련 전망이 어렵게 되면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7월 발표한 '2023~2024년 경제전망'에서 0.2%p 내렸습니다. 작년 국민이 기대한 정도의 연내 경기 반등 충족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고공행진을 해온 물가는 2%대로 떨어져 진입한 것은 다행이지만, 상승요인이 내재해 있기에 안정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세수감소로 인한 정부의 지출 감축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그 여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경제에 관여하는 정도가 작지 않음을 고려할 때, 지출 감소는 민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7월 4일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도민 생활경제와 전반 경기에 이

르기까지 체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려면 지자체를 비롯한 경제기관단체의 독자적인 대응이 정밀하게 나와야 합니다.

강원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 평균 모양새와 다르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국 제조업 비중은 총 부가가치(GRDP) 27%인데 비해 강원은 9%에 불과합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국지표는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비중이 높지만, 강원지역은 비금속 광물과 음식료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도 대면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경향은 강원지역의 경기 해법이 전국 흐름과 달라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강원형에 맞는 경제정책 발굴과 시행의 기본이 되는 경제통계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최근 내놓은 '강원 경제뉴스지수의 개발 및 활용'(문상윤·김상우·이영환 작성)은 각종 경제통계와 지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를 이용하자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강원경제의 특수한 실태를 파악 전망하는 구조가 없는 한 신속한 대응책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때입니다.

江原日報

2023 07 06 ()

/ 19

日 ‘오염수’ 방류 임박, 동해안 어민 피해 대책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예상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방류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류’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보고서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꺾지 않는 자국 어민들과 국제 사회를 향한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월 방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

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평가와 국민의 주관적 불안은 다를 수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해양·수산물 오염을 걱정한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견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

듯 일본의 선택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감정을 과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시할 일은 아니다. 특히 동해안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다. 동해안 어민들은 수산자원 부족, 기후 변화, 어선 노후화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돼 어촌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잡는 어업 중심의 강원자치도 동해안의 수산업은 귀어·귀촌을 유도하기 힘든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의 오염

수 방류는 동해안 어민들에게는 설상가상이다. 오염수 방류 이전임에도 수산시장에는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IAEA, “안전성에 문제없다” 결론 내려

여야, 이분법적 찬성·반대 벗어나야 할 때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실질적 해법 찾아야

여야는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야는 이 사안에 일도양단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를 외치고 국내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방사능 검출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더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욱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7 06 ()

/ 19

제2경춘국도 2029년 준공, 늘어난 공사비 반영해야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4년6개월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설계 완료를 앞두고 사업비 부족에 경기지역의 노선 반발도 거세져 또다시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는 1조2,86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사업을 맡겠다는 업체가 없어 연쇄 유찰 사태를 겪었다. 자재값 및 인건비 증가 등 인플레이션과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에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탓이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는 앞으로도 유찰 사태를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자체와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 원활한 입찰 집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선 갈등은 제2경춘국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서울~춘천 최단거리 관통을 희망하는 춘천과 도심 통과를 요구하는 가평의 노선안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데 1년10개월을 허비하면서 지금의 사업비 부족 상황까지 초래됐다. 한데 경기지역에서 해묵은 ‘노선 갈등’ 조짐이 다시 일고 있다. 제2경춘국도는 민자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포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강원권 접근성 향상과 관광수요 유발을 위해 강원도의 제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경기도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 차량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최단거리를 유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제2경춘국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지역이기주의에 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제2경춘국도는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됐으나 그동안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져 필요성이 대두됐다. 낙후된 강원도의 사회간접자본(SOC)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와 삼악산 로프웨이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제2경춘국도다. 특히 춘천은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정거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9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경춘국도 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 정치권과 지자체가 경기도와 치밀하게 협력해 제2경춘국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다.